



"인권침해·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·장애인"

입력 2023.11.22. 오후 12:00 수정 2023.11.22. 오후 12:01

인권위 '인권의식 실태조사'...인권교육 받은 경험은 11.5%



국가인권위원회 간판
[촬영 정유진]

(서울=연합뉴스) 정윤주 기자 =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(9천70가구의 가구원 1만5천303명)을 대상으로 올해 7월~9월 인권의식,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'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' 결과를 22일 공개했다.

인권익실 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5번째다.

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(50.3%)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·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봤다.

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(복수응답)으로는 경제적 빈곤층(17.6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다음은 장애인(16.5%), 노인(10.8%), 학력·학벌이 낮은 사람(8.6%) 순이었다.

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·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19.5%로 가장 많았다.

보호시설(요양원, 장애인시설 등)에서 생활할 때(15.8%), 직장생활할 때(구직·취업 포함 11.7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이 유출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다는 의견도 74.5%로 높았다. 다만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53.0%로 다소 낮았다.

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은 78.9%로 높게 집계됐다.

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.5%로 낮게 집계됐으나,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.4%로 높게 나타났다.

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21.2%로 가장 높았고,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(16.8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

한편, 인권위는 올해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 빌딩에서 토론회를 연다.

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 실태, 혐오표현 정책 제언 등을 공유한다.

jungle@yna.co.kr

정윤주(jungle@yna.co.kr)

Copyright © 연합뉴스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.

이기사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347479>
